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건]

2023. 6. 28.(수)

□ 경남 기사

- 경찰,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합천군 압수수색 (경남신문)
 - "확보 자료 토대로 관련자 소환"
- 청년 전월세 대출금 가로챈 20대 실형 (경남신문)
 - 창원지법,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

홍 보 담 당 관 실

경찰,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합천군 압수수색

“확보 자료 토대로 관련자 소환”

시행사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한 이른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30분 동안 합천군청 사무실 1곳과 피의자 5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11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들이

어가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90억원(PF 대출금 550억원,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 준공후 군에 기부

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시행사 대표는 4월 19일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군은 협약에 따라 시행사 대표가 들고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250억원의 대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군은 지난달 31일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비위행위 등에 관해서는 지난 5일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또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광수대 통보 >

공사 수주 대가 돈 받은 진주시청 전 국장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진주시청 전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시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전 국장 ㄱ(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ㄱ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

자 50대 ㄴ 씨와 브로커 60대 ㄷ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ㄱ 씨는 2018년 11월~2019년 6월 공사 수주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ㄴ 씨에게 7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자전거 사고...경남은 얼마나 발생하나

2018~2022년 5년간 3450건 발생
인도서 도로 합류·역주행 중 사고
안전장비 착용·교차로 정지 중요

경남에서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봄과 여름 등 야외 활동량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도 사고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경남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3450건이 발생한 가운데 63명이 사망하고 3529명

이 다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646건 중 10명 사망·667명 부상 △2019년 751건 중 12명 사망·763명 부상 △2020년 682건 중 16명 사망·700명 부상 △2021년 689건 중 10명 사망·부상 708명 △2022년 682건 중 15명 부상·691명 부상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단위 지역은 창원(809건), 김해(586건), 진주(30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 지역은 거창(104건), 창녕(92건), 함안(86건) 순이다.

자전거 사고는 교차로나 역주행을 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진주 인사동 한 도로에서 다른 차선으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다쳤고, 지난해 5월 28일 사봉면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버스와 마주쳐 충돌하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인도에서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주행 금지 △안전모 등 장비 장착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인도에서 운행 금지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 등을 강조했다.

경남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시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계도해 위법행위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청소년, 노인을 비롯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웅교기자 kyo1@gnews.co.kr

< 교통과 통보 >



창원서부경찰서, 전세버스 업체 대상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지난 26일 의창구 팔룡동 소재 ㈜현대고속관광을 방문해 전세버스 기사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관광

버스 사고사례를 토대로 버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탑승객 안전띠 착용 확인, 장거리 이동 시 휴식 시간 갖기 등을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慶南日報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010면 사람



밀양경찰 인력업체 교통 안전 교육

밀양경찰서는 27일 내이동 A인력 등 5개 업체를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24일 외국인 근로자 현장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향후 예방차원에서 안전벨트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 안전교육을 했다. 양철우기자

주차난 뻔한데 위법만 없으면 통과?

창원 신설 대형온천 주변 몸살
‘법 규정은 최소치’ 지적 이어져
지자체 인허가 때 조정 요구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지난 달 25일 개장한 대형 온천 건물을 두고 방문객 주차난, 주민 불편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설 측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건물 인허가 과정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26일 자9면 보도

‘스파 더 스페이스’는 한 건물에 대형 카페, 골프존, 식당, 찜질방, 마사지숍, 헬스장 등이 들어선 사실상 복합문화공간이다. 하지만 건물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전체면적 2만 1487㎡)나 방문객 수에 견줘 주차면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건물 인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법정 기준은 충족했는지 따져보게 된다.

창원시 건물 인허가 담당 부서 설명을 정리하면 스파 더 스페이스는 근린생활시설로 100㎡당 주차면 수 1면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 1층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스파 더 스페이스의 법정 최소 주차면 수는 132대다. 지난해 12월 준공 허가 때 스파 더 스페이스는 총 160대(지하 1층 107대·옥외 5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정 기준은 충족한 셈이다.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한동안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시설 측이 뒤늦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 현재는 차량 30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마을에 들어선 대형 온천으로 인해 주말이면 인근 도로가 차로 북빈다. 지난 24일에도 이곳을 찾은 차량이 길가에 줄줄이 주차돼 있다. /박신 기자

보했다. 인근 공터와 갓길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모은 결과다. 개장 초기처럼 왕복 2차로 도로 양쪽이 가득 찰 정도로 주차난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기준 충족과 별개로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난 등 개장 이후 발생한 문제를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9년 8월 건축허가를 받은 스파 더 스페이스는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은 한 명의 건물주가 운영하는 건물이다. 심의는 아니어도 스파 더 스페이스는 2019년 6월 한 차례 자문회의는 거쳤다. 하지만 해당 회의에서는 별도 수정 사항 없이 최초 설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스파 더 스페이스가 들어선 구산면 유산마을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만큼 더 세심한 논의가 필

요했다고 설명했다.

조형규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는 “사업자는 법적 기준에 딱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에 명시된 기준은 최소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개정할 수 없다면 지자체가 인허가를 낼 때 공공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산면 같은 경우는 스파 시설 외에도 카페나 숙박시설이 꾸준히 들어서는 곳인데 그에 걸맞은 주차 시설 등 인프라를 갖췄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건물 하나만 보고 법적 기준을 통과했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놓고 살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자문을 거쳤을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인허가를 냈던 걸로 보인다”면서 “다만, 자문회의의 형식이다 보니 구체적인 수정사항이나 조건을 부여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신 기자 pshin@idomin.com

통영 군부대 진출입로 땅 주인 몰래 개설 논란



경남 통영시 육군 제8358부대 명지소초 통행로가 지주 동의 없이 개설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독자 제공

**지주 “동의한 적 없다” 국가 소송
국방부·통영시 불법 목인 의혹
부지사용 허가 동의서도 엉터리
너도나도 “우리는 모른다” 뒷집**

경남 통영시의 한 군부대 진출입로가 땅 주인 몰래 개설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km가 넘는 산길을 콘크리트로 포장까지 해놨는데, 통영시와 국방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뒷집지고 있다. 석연찮은 책임 회피에 애꿎은 지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27일 통영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진출입로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 예하 명지소초에 장병과 물자를 수송하는 전술도로다. 폭 3~5m, 길이 1.2km다. 문제는 도로가 지나는 땅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지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재 조회 가능한 공문서를 보면 명지소초 통행로는 ‘1982년 통영시 산양읍장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농로·전술도로 개설을 위한 공원점사용 협의를 득했다’는 내용만 존재한다. 개설 주체는 ‘확인 불가’다.

그나마 위성사진을 통해 애초 사람만 오갈 수 있을 정도였던 비포장 산길이 2007년을 전후해 차량 통행도 가능한 콘크리트 도로로 확포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낭떠러지와 맞닿은 800m 구간과 굽은 길목에는 차량 추락이나 충돌을 막아 줄 철제 난간과 차량 교행을 돕는 반사경

도 설치됐다. 모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통영시와 국방부는 ‘우리는 공사한 적이 없다’며 모르쇠다.

심지어 소초가 자리 잡은 곳은 국립공원 구역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나무 한 그루를 베도 반드시 국립공원공단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의 땅이라면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가 필수다. 그런데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한 대형 공사를 국립공원공단은 허가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누가 했든지,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초 산양읍장이 공원점사용 협의 때 제출한 지주 동의서 역시 엉터리였다. 산양읍장은 당시 지주 3명이 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이들 이름이 없다. 땅 주인도 아닌 사람 명의로 허위 동의서를 만들어 협의를 받아낸 것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다. 부대 측은 2018년 8월, 도로를 따라 매설된 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117보 병연대장 명의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실제 토지소유자 22명의 이름과 소재지를 명시한 ‘협조 명단’을 첨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당사자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그럼에도 동부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통영시에 의견 조화를 요청했고, 시가 ‘토지소유자 동의 받으면 문제없다’고 회신하자 공사를 허가했다.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시 어떻게 (행위여부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규 개설이 아니라 추가 훼손이 없고 절차상 어긋난 것도 아니라 허가해 준 듯하다”고 전했다.

난데없이 땅을 뺏긴 지주 A 씨는 국방부에 무단 사용 중인 땅을 매입하거나 원상복구에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시간만 끌었다. 참다못한 A 씨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개설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A 씨 토지를 통행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도로 폐쇄다. 일반 도로와 연결된 진입부가 모두 A 씨 땅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반쪽짜리 협상안을 제시했다. 문제의 도로가 관통하는 A 씨 땅 4필지 10만여 ㎡ 중 실제 도로가 난 3020 ㎡ 부분만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A 씨는 필지 통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도로가 땅 중앙을 지나고 있어 잘라 팔면 남은 땅 가치가 급락한다는 이유다. A 씨는 “행정기관의 불법과 목인 속에 밀정한 사유지가 일반인은 접근도 하지 못하는 금단의 땅이 돼 버렸다”며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일단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지정도 안 된 상태라 관리 주체도 불분명한 길이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 산지를 도로로 바꿔 양성화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ikim@busan.com

청년 전월세 대출금 가로챈 20대 실형

비대면 심사악용 허위계약 1억 편취
창원지법,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 범행을 한 일당 중 허위 임차인 역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 브로커, 모집책,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B씨와 함께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속칭 ‘전세실장’인 대출 브로커, ‘매물실장’인 모집책은 A, B씨의 명의로 보증금 1억2000만원, 계약금 900만원의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도록 한 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납입 영수증 등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해 특별한 담보 없이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90%, 1억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1억원을 편취해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서 임차인 역할을 담당해 가담 정도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편취금 중 2000만원만 분배받은 점과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영진 기자

위험예측도 사고조치도 구멍 세아창원특수강 예고된 산재

직원들, 소방대 없이 단독 대응
사측,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아
소방당국, 실전 훈련·숙지 강조

최근 세아창원특수강(창원 성산구 신촌동)에서 발생한 파이프 깔림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비전문 의료 인력이 119구조대 도움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다 후속 대처가 늦어졌고, 회사가 채용한 유일한 전문 의료인력인 안전보건담당 간호사는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 또 세아창원특수강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현장 관리가 허점투성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26일 자 9면 보도

◇안전 수칙 미준수에 법 위반까지 = 세아창원특수강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 오전 8시 10분 공장에서는 사내 자체 소방대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 회사는 1200여 명이 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구급대응을 목적으로 24시간 대기하는 소방대를 운영했다.

문제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소방대 인력을 비상 대기시켰는데도 정작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고 당일 현장 수습에 나선 직원 2명은 사고 발생지점과 300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목격자 신고를 받고 5분이 지나서야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일반 직원일 뿐 의료인도

아니었다. 그런데 소방 쪽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독 대응했다. 재해자 이송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였다. 회사에 채용된 전문 의료인력으로는 안전보건담당 간호사가 있었는데 두 사람처럼 24시간 대기하는 인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는 주간 근무자라 사고 발생 때는 출근하지 않아 현장에 없었다.

◇안전에 관심 없던 사측이 사고 불려 = 안이한 초기 대응도 문제지만, 산재 사실을 확인한 후 사측이 보여준 대응 역시 부실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를 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즉시 문제가 생긴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상 사업주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바로 중대재해 사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9시 30분에 관련 사실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알렸고, 피해자가 사망한 지난 21일 오후 다시 사망 소식을 노동부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내부에 쌓여 있던 무게 2.5t, 길이 4.5m 파이프 더미 주변 작업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파이프에 깔릴 위험이 노출돼 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태형 변호사는 “긴급 구조 과정이 엉망이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초기 조치가 중요한데 그 당시 심폐소생

술을 어설프게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방대 운영 효과적이라면 =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같은 곳에서 운영되는 자체 소방대는 기본적으로 화재 진압에 초점을 두고 가동된다. 운영 계획서에도 진압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다.

다만,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해 응급구조와 방호 안전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다고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소방대는 근무 위치와 근무 인원 등을 생각해 초기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소방 안전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방대를 소집하는 등 편성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게 돼 있다.

소방 당국에서는 현장에서 소방대가 제 구실을 하려면 실전 같은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해경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위는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갑자기 생길지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각자 어떤 업무를 맡을지 미리 정하고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자주 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한 번 훈련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시에 무각본 훈련을 반복한다면 소방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환 기자 csh@idomin.com



홍태용 김해시장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홍태용 김해시장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지난 26일 '노 엑시트(NO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홍 시장은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마약 없는 건강한 김해시로 만들어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NO EXIT' 마약에 탈출구는 없습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한중민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 김해동부소방서장이 지난 23일 마약 범죄 예방 '노 엑시트(NO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퇴치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중민 서장은 "출구 없는 미로라 불릴 만큼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캠페인을 통해 마



약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



주 성 희

경제부 기자

창원 시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책가방 위에 속도 표시 형광 색 뒤키표를 씌운다. 그럼에도 하교할 때 신호등 없는 건널목 앞에서 서성인다. 사방을 살펴봐도 갑자기 차가 진입할지도 모른다.

건널목을 같이 건널 보행자도 없다. 주차된 차 사이에 잠시 몸을 숨긴다. 차창을 열고 지나가도 된다고 말하려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일어난 스쿨존 사고가 떠오른다.

사서교사 ㄱ 씨는 학교 후문으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 가족의 말과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학교 후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있었다. 도로 신호는 주황색 점멸등이었다.

트럭 운전자는 좌회전으로 스쿨존에 진입했는데 보행자를 보지 못

해 사고를 냈다.

이 사서교사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 도로에는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계, 폐쇄회로(CC)TV가 없다.

피해자 가족은 다음 날 오전 학교 측에 사고 소식을 알렸다. 학교는 그 날 오후 행정서류를 요구해왔다. 사서교사 ㄱ 씨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물으니 신호등이 점멸로 바뀐 건 2021년부터였단다. 주변 주거지역에서 차량흐름에 방해되니 신호등을 꺼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경찰이 받아들였다.

ㄱ 씨 가족 입장을 헤아릴 길이 없다. 스쿨존 사고는 지역을 구분하지도 학생·교사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보행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아니다. 과태료를 몇 배로 물어도 사고는 일어났다.

해당 사고 지역 신호등은 여전히 점멸 상태다. 경찰,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27일 후문 합동점검에 나섰다.

무엇이 먼저인지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의 날씨

출근시간비... 장마소강상태

28일 부산 울산 경남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6월 28일 (음 5월 11 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30 자외선 30 피부 40 냉방 70 빨래 20

☀ 맑음 ☁ 맑은 후 구름많음 ☁ 한때 비
 ☀ 구름조금 ☁ 구름많은 후 맑음 ☁ 천둥번개
 ☁ 구름많음 ☁ 흐리고 비 ☁ 흐리고 비눈
 ☁ 흐림 ☁ 소나기 ☁ 흐리고 눈

해돋이/해질 05:11 19:42 달돋이/달질 14:15 01:00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3:08 16:19	09:11 22:17
인천	11:34 -	05:22 18:06
포항	11:27 -	05:04 18:19
통영	03:38 16:54	09:58 22:47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남~남서	7~11	0.5~1.5
남해동부	남~남서	4~9	0.5~1.5
동해남부	남~남서	7~11	0.5~2
동해중부	남서~서	5~9	0.5~1
서해중부	남~남서	4~9	0.5~1.5
서해남부	남~남서	7~11	0.5~1.5

주간날씨

	29(木)	30(金)	1(土)
부산	☀ 23~26	☁ 23~27	☁ 22~27
울산	☀ 24~28	☁ 24~28	☁ 22~27
진주	☀ 24~27	☁ 23~29	☁ 22~30
김해	☀ 24~27	☁ 24~28	☁ 23~29
창원	☀ 23~27	☁ 23~28	☁ 22~29
통영	☀ 22~25	☁ 22~26	☁ 22~27
대구	☁ 24~30	☁ 24~31	☀ 22~31
세종	☁ 24~27	☁ 23~29	☁ 22~31
서울	☁ 23~26	☀ 22~29	☁ 23~31
제주	☁ 25~30	☁ 25~29	☁ 24~29